

등교 확대 필요하지만... 여전히 '기대반 우려반'

교육부 방침에 찬반 논란 여전

교육부가 올해 3월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불확실해 찬반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2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 원칙을 유지하되 유치원생과 초등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5단계까지 등교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도 작년 '300명 내외'에서 '400명 이하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로 정했다. 특수학교(학급)도 2.5단계까지 전일 매일 등교 가능하며,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1대1 또는 1대2 대면 지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학습 격차 완화·돌봄 부담 감소에 긍정적 반응

코로나 확산 속 "너무 이른 조치"... 부정적 시각도

교육부의 발표에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일단 등교 확대방침에 대해선 반기는 분위기다. 돌봄과 대면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등교 확대방침에 "학습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부모들 역시 이번 등교 확대 조치로 학생들의 학습수준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올해 초등학교에 아들을 보내게 된 김모(37)씨는 "지금도 아이가 어린이집을 매일가고 있는데 방역이 철저한 것 보니 안심이다"며 "직장 다니는

엄마들도 돌봄 걱정이 줄어들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다. 코로나19 확산 등이 유행적인 상황에서 방역에 허점이 생기면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최근 광주 TCS국제학교 등에서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상 등교는 아직 이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이룬 방역성과가 엄격한 등교 제한으로 얻은 효과이므로 정상등교, 급식 등 학교 일상이 시작되면 같은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안전한 등교 수업이 담보되면 교실 내 밀집도를 줄이는 게 관건이므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환경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신학기 실제 등교 성사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달렸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등교를 하고 싶어도 2월까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거나 더 확산될 경우 등교 확대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종교 관련 국제학교별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당초 29일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도 연기했다. 또 다음달 11·14일 민족대이동 설 연휴가 예정돼 있다.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면 통상 확진자 수는 1~2주 뒤 반영되기 때문에 2월 마지막주는 돼야 3월 실질적으로 등교를 확대할 수 있을지 가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교내 전파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역학조사 결과가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학생 감염 위험도 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어린이·청소년의 성인 대비 감염률이 낮고, 증상도가 경미하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증상자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상황을 감안해 방역당국의 신중한 판단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을 요구한 초등학교 교사 역시 "지난해처럼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하루이를 뒤 급박하게 등교와 원격수업을 전환했던 양태가 올해도 바뀔 것 같지 않다"며 "교육당국은 교사들이 예상할 수 있게 미리 상황을 공유하고 부족한 점은 빠르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지법원장 고영구·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

광주지법원장으로 고영구(62·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18기) 춘천지법원장이 보임됐고 김광태(15기) 서울고등법원장은 대전고법에서 자리를 옮긴다.

또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7개 법원에서 법원장이 보임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청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원 판사들이 법조경력 22년 이상 판사를 대상으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최초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장에 서경환(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김용철(25기)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북부지법원장으로 김한성(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에 김형훈(25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구지법원장에 황영수(23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으로는 전상훈(22기)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반면, 광주지방법원장의 경우 추천된 3명의 후보자 중 일부 후보자가 후보 동의를 철회했고 기관장으로서의 덕목 등을 고려해 추천자가 아닌, 고 부장판사를 임명했다는 게 대법원측 설명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린이집 긴급 휴원 명령

광주 TCS 국제학교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시가 다음달 14일까지 광주 어린이집 1072곳에 대해 28일 긴급휴원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광주 북구청 북육지원팀 직원들이 구청직장어린이집에 긴급휴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스마트한 새 전남대병원 본격 추진

건립추진위 발족

호남 거점 병원인 전남대병원이 차세대 선진의료로 선도해나갈 새병원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대병원은 28일 오후 병원 6동 백년홀에서 새병원건립추진단 발족식을 갖고, 병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새병원에 대한 청사진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족식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안영근 병원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은 수차례 언급됐지만 병원 내의 상황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지난해 11월 취임한 안영근 병원장이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추진단을 발족하게 됐다.

새병원건립추진단은 새병원건립추진위원회, 새병원건립추진본부, 새병원건립추진자문단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안영근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병원보좌자와 임직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새병원 건립을 위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이다. 추진본부는 민용일 응급의학과 교수를 본부장으로 본부부장·실무총괄·실무전담·실무자문·행정지원전담 등으로 조직돼 새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사업 실무 총괄 및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자문단은 사회 각 분야의 인사 20여명으로 구성돼 새병원 건립 추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현안 자문, 건립사업 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새병원 건립은 오는 2023년까지 예비타당성을 거쳐 2024년부터는 새병원건립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새병원은 최상의 환자맞춤형 통합진료, 최첨단 헬스케어 융복합의료연구, 세계적인 의료이더 양성이 이뤄지는 스마트병원으로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희종 기자 chae@

학생들 건전한 인터넷 사용 교육 강화

이민준 도의원 '도교육청 인터넷 중독 조례 개정안' 발의

전남교육청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법적 요건이 새롭게 정비된다.

이민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의 법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전부개정에 맞춰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 변경(전라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서비스과 의존의 정의 신설(제2조 제2호 및 제2조 제3호) ▲인터넷중독예방위원회 보궐위원 임기 부분 삭제(제8조) 등이다.

특히 상위법에서 '인터넷중독'이라는 표현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대체돼 전반적인 용어 정비와 문구 수정이 시행됐다. 또 상위법과 조례의 교육 범위를 일치시킴으로써 통일되고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광주 북구, 최우수기관 선정

광주시 북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전국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 관련 총 4개 부문, 8개 항목, 20개 지표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북구는 지난 2017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대상 기관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1등급을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